

민주-혁신 통합, 지방선거 후 재추진

민주, “지선 전까지
합당 논의 중단키로”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혁신 “與 제안에 동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사과하며,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 이후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밤 긴급 발표를 통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통합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당내 의회에서 제기된 통합 논란과 이에 따른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중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통합이 시너지를 발휘할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적멸을 위해 통합을 통한 승리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 제안 이후 당 안팎에서 우려와 반발이 확산됐고, 통합을 통한 상승효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대표는 “여러 차례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면밀히 살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결정 △지방선거 이후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추진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 결정했다.

지도부는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의 운명은 당원이 결정한다”며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큰 아쉬움과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에 찬성한 것도 반대한 것도 모두 애당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통합 논란보다 지금은 당내 화합이 더 시급하다”며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빛이진 모든 일은 제 부족한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과 민주당 당원,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사과의 뜻도 함께 전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활을 멀리 쓰기 위해서는 활시위를 더 뒤로 당겨야 한다”며 “지도부는 더 낮은 간결한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도 통합과 관련해 1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

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에 대한 추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가 안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의 연대가 강해지길 바란다”며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을 한 지 19일 만에 합당에 대한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들게 되었으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애를 태우는 기간이었다.

/이만호 기자



법안 제출하는 개혁진보 4당 대표자들. 한향민(왼쪽부터)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수(진보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투표 당선 방지법', '비례대표 봉쇄조항 삭제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겨울철 제설, 기본 안전관리”

김윤덕 국토부장관, 도로제설 대응 태세 점검·관계자 격려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현장 서울문산고속도로 제설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급격한 기상 변화로 도로 결빙 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설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경각심을 높여 대응토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겨울철 제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다”며 “한 치의 방심 없이 제설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겨울 입·출구, 급경사지, 응달 구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사전에 점검하고, 폭설이나 한파가 예보될 경우에는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장관은 동일한 지역에서 유

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관행이나 인위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부로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폭설이나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안내를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제설 참고와 제설 자재·장비 관리 현황 등 제설 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들께서 출근하고 이동하는 평범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제설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 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로 인한 잦은 발생 작업으로 현장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자 양도록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로 인한 잦은 발생 작업으로 현장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자 양도록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장관은 동일한 지역에서 유

/권희성 기자

“다시 시민 곁으로... 익산의 위대한 대전환 시작”

조용식 전 전북청장, 익산시장 출마 공식화... '균형발전 기초와의 연계' 발전 전략 큰 축 제시



국힘 도당 청년위

“지선 청년 출마자 모집”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강경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청년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태영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경록 청년위원장이 직접 회견문을 낭독했다.

강 위원장은 “전북을 사랑하기에 전북의 지금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전북 지방정치는 오랫동안 익숙함에 머물러 왔고 그 과정에서 견제와 경쟁이 점차 사라졌다”며 “정치가 시민보다 정당 내부를 먼저 바라보고 정책 경쟁 대신 공천을 둘러싼 출세우기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익숙한 정치가 아니라 도민 앞에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정치”라며 “환벽한 정치인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전북에는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정상적인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 출마자 신청은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당 공식 카페와 SNS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11일)부터 25일까지 6·3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모집해 약 6주간 선거법과 후보자 지원 등의 교육을 실시한 뒤 지방의원 등으로 출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위원회 소속인 김경찬씨는 전주 평화·2동과 서화동을 지역구로 시의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와 익산의 위대한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회복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단순한 개발과 확장이 아닌, 시민의 삶을 되살리는 도시로의 전환이 그의 핵심 메시지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지난 4년여의 시간을 먼저 꺼냈다. 잠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봉사 현장과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누비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었고 그 경험이 정책 구상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시민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그의 말에는 현장을 중시하는 태도가 묻어났다.

조 후보는 익산 발전 전략의 큰 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초와의 연계를 제시했다.

피지컬 AI, 새만금 RE100 등 국가 전략사업을 익산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에 맞물려 지방이 도약할 기회”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과 정책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을 강조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확장이 아닌 회복’이라는 도시 철학이다.

그는 “이제는 얼마나 커질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해질 것인가를 묻는 시대”라고 말했다.

자존심의 회복, 삶의 질의 회복, 경제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행복의 회복 등 다섯 가지 가치를 제시하며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약속했다.

성장의 속도보다 삶의 온기를 중시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만호 기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체적 공약도 내놓았다. 전 시민 1인당 10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세금 인상 없이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침체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단기 처방이자,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년 정책도 핵심 공약이다. 100만 명 규모의 AI·로봇·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해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원광대학교를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업 지원 확대와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관리가 아닌 구조를 혁신하는 시장,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한편, 조 총마치는 1987년 경찰에 입문해 34년간 민생 치안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다. 익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하며 지역과 중앙을 두루 경험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해 정주 환경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통과 안전 분야에서는 실용적 접근을 내세웠다.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쿠폰 지급, 점심시간 주차차 허용 확대, 교통신호 연동체계 최적화 등을 통해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익산형 통합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재난과 범죄에 선제 대응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시장직을 정치적 부담으로 삼지 않겠다”며 결과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라 임기 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다짐이다.

관리가 아닌 구조를 혁신하는 시장,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한편, 조 총마치는 1987년 경찰에 입문해 34년간 민생 치안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다. 익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하며 지역과 중앙을 두루 경험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어획·전제·양륙 등 어업 활동 전반 통합 관리

민주 윤준병 의원, ‘지속가능 연근해어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정음·고창)이 연근해어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어획·전제·양륙 등 어업 활동 전반을 통합 관리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

심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수온 현상 등으로 수산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존 투입양 중심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어선 위치 발신장치 정상 작동 의무화, 조업일 별 어획·전제 실적 보고, 지정 장소 양륙 및 실적 보고 등을 제도로써 어업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체계를 정비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남원시장 출마’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 ‘정책토론회 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원시장 출마하는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시 민공개 정책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양 전 청장은 “이번 토론회는 특정 후보의 우위를 가리는 지리가 아니라 남원시가 직면한 재정위기와 중대한 현안을 시민과 함께 풀기 위한 과정”이라며, “공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대안은 누가

민중당 남원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공약으로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 약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누가 새로운 시장이 되더라도 신규 정책 추진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복지·지역개발·청년·문화 예산의 축소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시민 앞에 밝히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청장은 가급적 경신 이전 조기에 공개적인 정책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남원=김기두 기자